

□ 국내 법인세 높은 편이다

1. 정부 법인세 인상론

○ (법인세 인상론) 정부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구축, 자주 국방, 대형 국책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세수 확충안으로 법인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음

- (정부의 세수 부족 규모) 2004년에는 4.3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되었으며, 2005년 4.6조 원(전망치)의 세수 결손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 세수 부족 현황 >

(단위: 조 원)

구분	2004년			2005년	
	예산	실적	부족액	예산	부족액(전망치)
총국세	122.1	117.8	4.3	130.6	4.6

자료: 재정경제부 세제실, 「최근의 세제 현황 설명회 자료」, 2005. 9. 29.

- (법인세 인상론의 근거) 정부 여당에서는 경쟁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충 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경쟁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한국의 법인세율은 현행 지방세 포함 27.7%로 OECD 평균 28.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대만 25%, 싱가포르 20%, 홍콩 17.5%보다 높은 수준임¹⁾

< 각국의 법인세율 >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OECD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법인세율	25	35	33.3	30	30	28.4	30	25	20	17.5
지방세포함	27.7	40.8	35.4	40.9	30	-	33	25	20	17.5

자료: 재경부 세제실.

1) 정부 의견에 의하면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 국가 또는 자치체, 대만의 경우는 지방세를 제외하면 동일한 법인세율이라는 점에서 경쟁국 또는 선진국의 범주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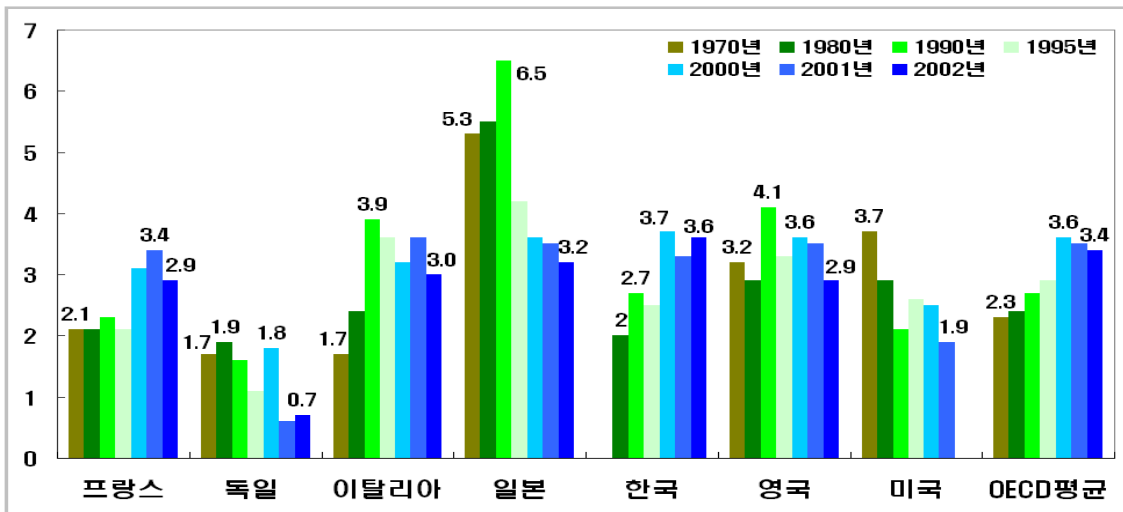
2. 법인세 부담 국제 비교

- (질적으로는 높은 법인세율) 정부는 양적이고 표면적인 법인세율을 들어 비교국들보다 법인의 세 부담이 낮다고는 하나 GDP 대비 법인세율, 영업 잉여 대비 법인세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임
- (외국보다 큰 법인세 부담) 한국은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 뿐 아니라 평균유효법인세율 등 실질적인 법인의 세 부담이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음
- (높은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이 선진국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OECD 평균: 1970년대 이후 2000년까지 법인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1년부터 하락하고 있음
 - 미국: 1970년 3.7%에서 2000년까지 2%대를 유지하다가 2001년에는 1.9%까지 하락함
 - 일본: 1970년 5.3%에서 1990년까지 OECD 최고 수준인 6.5%까지 상승하다가 1995년 4.2%, 2000년 3.7%, 2002년에는 3.2%까지 하락함
 - 기타 선진국: 영국, 독일 등 기타 선진국들 또한 최근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
 - 한국: 1980년 2.0%에서 2000년 3.7%까지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잠시 3.3%까지 하락하였으나 2002년 다시 3.6%로 상승하여, 세계적인 법인의 세 부담 하락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높은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부담) 한국의 GDP 대비 법인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 GDP 대비 영업이익 비율: 한국의 GDP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2001년 14.3%로 미국 20.7%, 이탈리아 23.1%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독일 18.1%, 영국 16.3%, 프랑스 16.2%에 비해서도 낮음

-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 반면 한국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0.4%에서 1999년 17.3%로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 21.5%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프랑스 19.3%, 캐나다 11.2% 보다 높은 수준이며 독일 보다는 무려 19.9%p 높은 수준임

< OECD 각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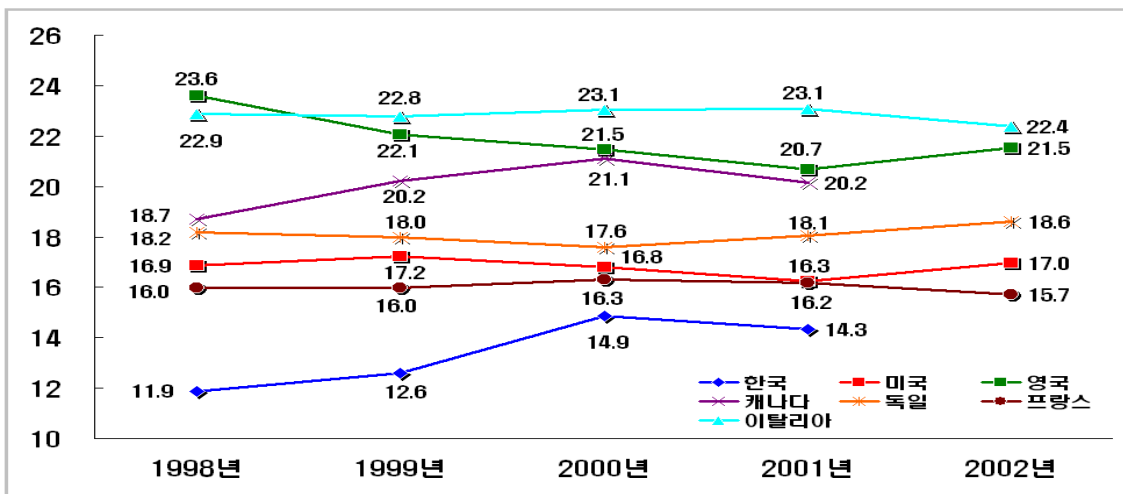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4.

주: 지방세 포함.

< GDP 대비 영업이익 비율 국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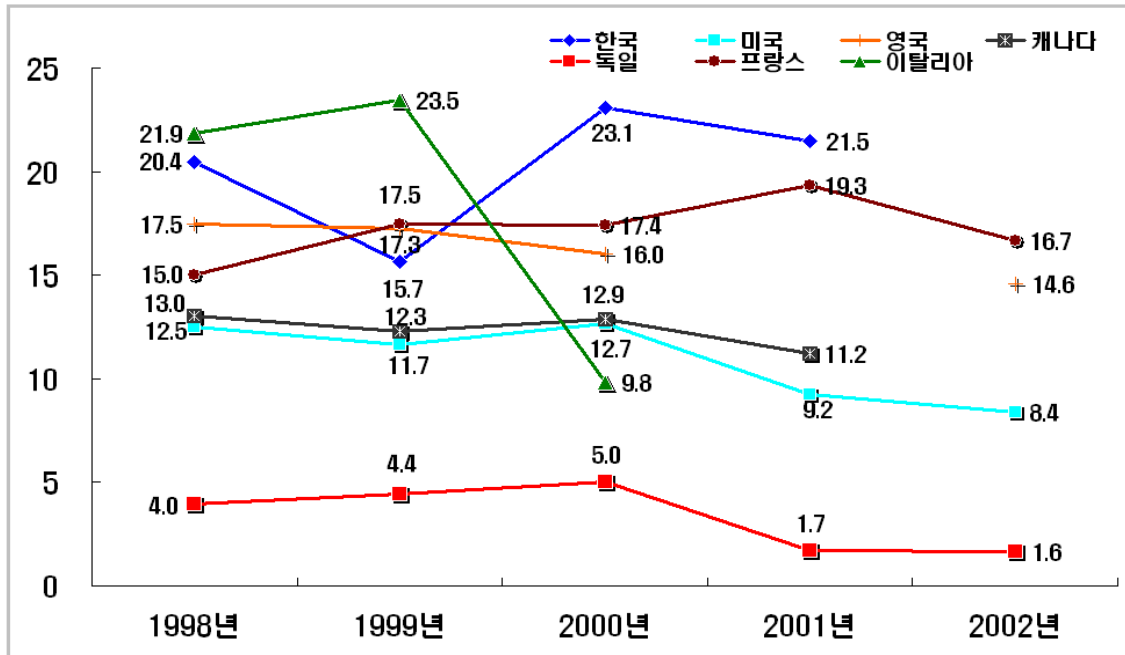
(%)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4; IBFD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European Tax Handbook*, 각 년도;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각 년도.

<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 국제 비교 >

(%)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4;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년도;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각 년도.

-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높은 평균 유효 법인세율)²⁾ 한국 법인기업의 평균 유효 법인세율은 영업이익 기준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모두 대만, 싱가포르 등 특정 동아시아국가들보다 높음
 - **영업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 한국의 영업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은 2003년 기준 24.25%였으나 대만 10.95, 싱가포르 14.87%, 태국 17.86%, 홍콩 19.05%로 4%p 이상 높게 나타남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 한국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은 2003년 기준 26.93%이나 대만 12.74, 싱가포르 17.43%, 태국 20.45%, 홍콩 20.82%보다 6%p 이상 높은 수준임

2) 박기백·김진(2004. 12)의 기업 미시자료에 의한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에 의하면 G7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어 선진국들과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기백·김진, 「법인세 부담 연구-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12월 참조.

< 한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평균 유효 법인세율 비교 >

(%)

구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영업이익 기준	대만	18.38	14.39	13.28	13.01	10.95
	싱가포르	23.82	20.60	24.11	21.17	14.87
	태국	22.78	14.56	15.91	18.48	17.86
	홍콩	14.71	14.62	16.48	16.92	19.05
	한국	18.00	23.83	24.13	28.63	24.25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대만	24.31	16.78	16.10	15.72	12.74
	싱가포르	24.02	21.01	22.93	24.43	17.43
	태국	28.74	22.15	22.99	24.31	20.45
	홍콩	11.94	14.03	18.83	18.29	20.82
	한국	31.67	24.37	27.02	25.89	26.93

자료: 박기백·김진, 「법인세 부담 연구-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3. 세계적인 법인세 변화 추세

○ (세계적인 법인세 감세 추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은 각종 감세 정책을 도입, '감세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미국) 2003년 법인세를 10년간 164억 달러 줄이는 감세안을 통과시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03년 35%에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32%까지 낮추기로 함

- (일본) 버블붕괴로 인한 장기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1998년 법인세율을 최고 34.5%에서 30%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2002년에는 중소기업 법인세 310억 엔 감면, 2003년에는 연구개발 관련 세제 개혁으로 총 1조 4,170억 엔 규모의 법인세를 감세하였음

- (기타) 싱가포르,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선진 각국의 법인세 감세 추세 >

구분	법인세 감세	기타 감세	비고
미국	- 2003년 35%→ 2005년 34%(2009년 32%)		- 단계적 감세 - 규모: 10년간 164억 달러
일본	- 1998년 35.4%→32%	- 연구개발 세제 개혁 등 1조 4,170억 엔 감세	- 항구적 감세 조치 - 중소기업 법인세 총 310억 엔 감세(2002년)
영국	- 1997년 33%→31% - 1999년 31%→30%		
독일	- 2004년 26.5%→25%		
프랑스		- 부가세: 2002년 10%→ 6%, 2003년 폐지	
아일랜드	- 2003년 24%→12.5%		
캐나다	- 2000년 28%→21%		
싱가포르	- 2000년 24.5%→20%		

자료: 각종 보도 자료.

4. 법인세 인상의 영향

○ (법인세 인상의 영향) 법인세 인상에 의한 세수 증대로 국가채무 증가세 둔화 등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경기침체 지속 상황 하에서 민간투자 감소에 의한 중장기 경제성장잠재력 하락, 국제 조세경쟁력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긍정적인 영향)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 균형 회복 및 국가채무의 증가세 둔화, 민간 소비 및 투자 보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 국채발행 억제를 통한 국가채무³⁾ 증가세 둔화: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⁴⁾는 재정 균형 회복 뿐 아니라 국채 발행 증가를 다소 억제할 수 있어,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음

3)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1997년 60.3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04년에는 203.1조 원으로 7년간 약 3.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는 325.8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4)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2004년 4.3조 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에도 예산대비 4.6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다.

- **민간 소비 및 투자 보완⁵⁾**: 세수 증대에 따르는 정부 지출 확대는 민간 소비 및 투자 보완을 통해 경기 회복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된 세수를 저소득층에 직접 지출하거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됨
- **(부정적인 영향)** 한편 법인세 인상은 민간투자 감소에 의한 경제성장잠재력 하락, 국제 조세 경쟁력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임
- **경제성장잠재력 하락**: OECD (1997) 에 의하면 명목 GDP 1%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의 항구적 감소와 세수감소분만큼의 경상이전지출을 축소하면 중장기 경제성장률은 0.03~0.09% (2004년 GDP 778조 3,322억 원 기준 23.4조 원~70조 원) 상승효과가 있으나⁶⁾, 만약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이러한 중장기 경제성장효과는 상실될 것임
 - **국제 조세 경쟁력 하락**: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외국인투자 유치에 애로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통한 경제성장잠재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5. 대응방안

- **(경제 변화 예상 능력 확충)** 정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최근 세수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장률, 환율 등 경제 변화에 대한 예상 능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변화 예상 능력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5) 단 정부 지출 확대는 상대적으로 민간 투자를 축소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최근에는 정부 지출보다 민간 투자 촉진에 의한 경기활성화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6) Roeger Werner and Jan in't Veld, "Effects of Taxation in QUEST II," in *Tax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OECD, Paris, 1997.

- (중립적 세수확충 정책 필요) 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잠재력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잠재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경기 중립적인 세수 확충정책이 필요함
- (기업 환경 개선)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준조세와 같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준조세 정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준조세 정비: 준조세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에는 준조세 규모가 10조 415억 원에 달해 정부의 세수 부족분 4.3조 원의 2배 이상 규모에 달하고 있어 준조세에 대한 포괄적인 정비를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낮추어 투자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각종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에게 투자 활력을 주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조세 징수시스템 재확립) 정부의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 또한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초과하고 있어, 현행 조세 징수시스템의 재확립을 통해 부족한 세수분의 확충 및 기업과 국민의 세수 부담 경감을 꾀해야 함
 - 불납결손액 규모: 납세자의 재력 부족, 거주지 불확실 등의 이유로 정부가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2004년에 7조 5,000억 원 (2003년 6조 5,379억 원 대비 14.7% 증가) 에 이룸
 - 조세 징수시스템 정비 필요: 이는 2004년 세수 부족분의 약 1.7배에 가까운 규모로 현행 조세 징수시스템의 정비 및 재확립이 필요함
- (정부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고령화 저출산 현상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공공부문 개혁)** 장기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재정적자 확대 및 국가 채무의 급팽창을 경험한 일본은 코이즈미 총리 집권 이후 지속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규모를 축소,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조직 개편:** 2001년 1부 22성청에서 1부 12청성, 128개국에서 96개국, 1,166개과에서 997개과로 축소함
 - **인원 및 인건비 감축:**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앙관청에서 3만 3,230명의 인원을 감축할 뿐 아니라 우정공사 민영화로 28만 명이 민간인 신분이 되며, 2005년 인건비 0.36% 감소를 비롯하여 2015년까지 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임
 - 기타 공무원 급여 체계 개혁,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등 각종 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

- **(한국은 정부 규모 확대)** 한국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 및 고령화등 사회 구조가 급변하면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2만 2,422명 증가하는 등 정부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정부부문의 개혁이 시급함
 - **공무원 인건비 증가:** 2003년 15조 7,599조 원이었던 공무원 인건비가 정부 조직 확대 등으로 2005년에는 19조 291억 원으로 20.7%나 증가하였음
 - **공무원 연금 적자 증가:** 2005년에 7,330억 원에서 2010년에는 2조 7,93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건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공기업 민영화 부진,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 현재 정부규모가 유지 또는 약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임**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